

전기차 살때 배터리 제조사·생산국등 확인 가능해진다

국토부, 자동차통류 규칙 개정 제조연월등 공개정보 6~10종 반복적 결함 발생엔 인중 취소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고장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 등 핵심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인중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5월4일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등 판매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가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등 정보만 제공 대상에 포함해 있는데,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 국가,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도 제공해야 한다.

정보제공 방법도 인터넷(판매사 홈페이지 등),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및 온라인 등으로 다양화·명확화했다는 게 국

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어긴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도 대폭 높인다.

현재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지만 개정안은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부

과 액수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배터리에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2~4회 발생하면 결함의 경중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취소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노조비 7억 횡령해 인터넷 도박 부산항만공사 간부 징역형 집유

法 "피해금액 변제등 참작"

노조조합 조합비를 횡령해 도박 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만공사(BPA)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BPA 노조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지난 2020년 8월~2023년 12월 21차례에 걸쳐 조합비 7억8000여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해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대출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조합비 원금을 보정하면서 이윤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노조위원장 지시를 받은 뒤 범행을 시작했다고 드러났다.

처음엔 5차례 걸쳐 1500만원을 인출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고 액수도 역대로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범행은 BPA의 부산 복합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 의뢰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애초에 수사가관은 해당 사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수사하다 A씨가 공문 기간 등 실무직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과의 금전거래 내용을 조사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체 정황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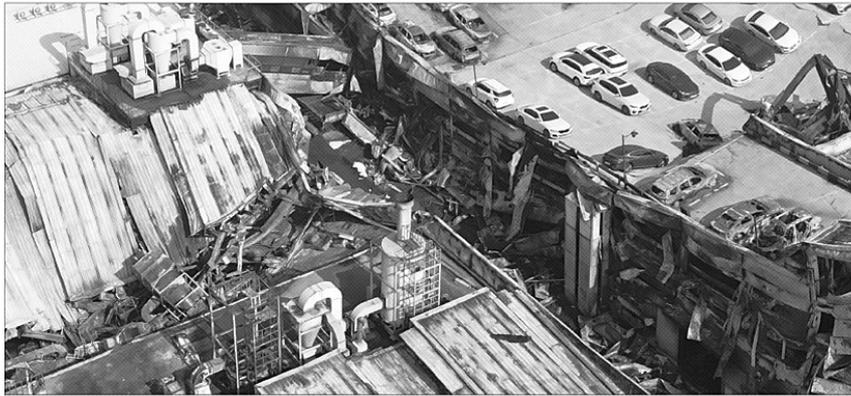
수사기관은 문제의 금전거래가 복합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정하게 금액이 오간 것이라고 의심했으나 A씨가 노조 조합비를 횡령한 것이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금액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 노조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화재로 주저앉은 대전 공장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외관을 21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가내 보조배터리 반입 여건 작년 43만건... 1편당 1건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공항에서 적발된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위반이 40만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조배터리 인접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이 시행된 지난 2025년 3월1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1년새 공항 보안 검색대 등에서 확인된 규정 위반 건수는 총 43만 305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국내 공항에서 출발한 여객편이 총 43만6826편인 점을 고려하면 1편당 0.99건이 적발된 셈이다.

반입 적발 유형별로는 배터리를 캐리어 등 위탁 수하물에 넣어 보내다가 제지당한 건수가 34만9144건(80.6%)으로 압도적이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중고나라'에도 캄보디아發 범죄조직... 1400명 67억 피해

물품 소액거래 사기조직 적발 사이버사기등 집중단속 나서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이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사기를 벌이다 적발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한 범죄 조직은 최

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벌여 1400여명으로부터 67억원을 가로채다 적발됐다.

주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연애 비사 사기) 등을 벌이던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소액 거래 위주인 중고 거래까지 침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

부는 이달 23일~10월31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범죄 조직은 ▲소규모 사기 ▲계인 사기 ▲불법투자업체 운영 ▲불공정거래 행위 ▲불법금융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이 주된 대상이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감도 높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동일 범행 수법이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범행 수사로 범죄 조직을 일괄 검거하고, 자금세탁 행위도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대운 기자 nice@siminilbo.co.kr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 法 "자발적 업무외 모임... 산재 아냐"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애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택배기사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다른 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 도중 육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24년 1월 의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최근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유족급여와 장애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가족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유족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회사의 관리자가 회식을 개최하거나 주관하지 않은 점과 택배기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업무 노후 등이 공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나, 참석자들이 모두 택배기사인 만큼 공동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불과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현민 기자 mmh@siminilbo.co.kr

'인천 건축왕' 2심서 유죄... 무죄 뒤집혀

개발 비리 지역 1년6개월 집유 'SPC 재무상태 부풀리기' 인정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으로 옥살이 중인 '인천 건축왕' 남 모씨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 비리 관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수8-2부는 경제자유구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운영하거나 설립한 회사를 통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땅값까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씨가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주력회사 재무 상태를 부풀렸고, 통해인근경제자유구역 역형(동자점)을 심사위원들은 이 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사업 재건을 돕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남씨 SPC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씨가 적극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 했다가보다는 동자점 관계자들의 권유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남씨는 자신의 SPC가 강원경제자유구역내 땅값까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주택회사 재무 상태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이 사건은 남씨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올라가 있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한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는 여러 건의 전세사기 범행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우선 2022년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전체보증금 6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죄로 인정돼 202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305억원대(피해자 272명), 83억원대(피해자 102명), 28억원대(피해자 78명), 24억원대(피해자 77명) 전세사기 혐의로 각각 1~2년 징역이 확정됐다.

이대운 기자 nice@siminilbo.co.kr

에비군 훈련 미루려 진단서 위조 法, 40대 징역 6개월 집유

에비군 훈련을 미루려고 진단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심재희 판사는 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4년 3월19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의사 명의의 진단서 남작을 위조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2024년 3월18~21일 시행된 예비군 동미합동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한=문현민 기자 mcs@siminilbo.co.kr

중심을 잡습니다 핵심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국내의 최대 취재망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언론의 시작은
언제나 연합뉴스입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